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발전의 심장’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성명서 발표… “환경 보완 철저히 하고 항소 강력 추진해야”

전북 지역 건설인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위해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민의 오랜 희망을 짓밟는 참담한 결과”라며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인 국제공항 건설은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전북 내 10개 건설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 기구로,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연합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히 비행기를 띄우는 관문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전북 경제를 비약적으로 도약시키며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 유치에 촉진하는

전북의 미래 성장 엔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그 상징성과 절박함을 입증한다”며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지금 멈춘다면 국가균형발전 전략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또한 “다른 시·도들은 예타 면제를 통해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이 여전히 국제공항 하나 없는 낙후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이번 판결로 새만금 국제공항마저 좌초된다면, 이는 명백한 지역 차별일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 성명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을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의해 철저히 보완하고, 향후 항소 과정에서 대응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가치가 아니며, 충분한 보완책 마련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재철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이 무려 30년간 간절히 열원해온 숙원 사업”이라며 “전북은 이미 수십 년간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지역 균형발전의 무게추를 바로 세우고, 전북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건설인들은 도민과 합

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을 넘어선다고 지적한다. 국제공항 건설의 지연은 지역 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 관광산업 성장 등 다방면에 걸쳐 파급력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북도민의 열망과 정부의 정책적 약속이 뒤흔들린다면,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담겼다.

한편,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07년 출범 이후 전북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온 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도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식품기업들과 함께 호주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 식품, 호주 시장 뚫다

바이오진흥원, ‘Fine Food Australia 2025’ 서 수출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식품기업들과 함께 호주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호주 시드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주 최대 식품박람회 Fine Food Australia 2025에 참가해 총 75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2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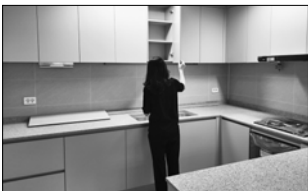
Fine Food Australia는 호주 대표 식품 전문 전시회로, 40여 개국 850여 개사가 참가하고 약 2만 6천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 아시아 식품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오세아니아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참가를 위

해 현지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을 사전에 분석하고,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요건과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 그 결과 전북 농생식품산업을 오세아니아 시장의 전략적 거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청정 원료 기반의 기능성 식품과 정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간편식 제품이 특히 주목받았다. ‘간편한 조리’, ‘프리미엄 건강’, ‘아시아 식문화 친숙함’이라는 키워드를 충족시키며 다문화 소비층이 무려 호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지 바이어들은 한식의 건강성과 간편성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부승데시앙 주부모니터 품질점검 “만족도 큰 것”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익산 부승데시앙 아파트가 주부모니터단의 품질 점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높은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활동한 주부모니터 5기는 부승데시앙 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 세대 내부 마감 상태, 위생 설비, 도장, 생활 동선 등 다양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폈다. 참여한 주부들은 “세대 내부 공간 설계와 마감 품질이 기대 이상으로 우수하다”며 “실제 입주자 더군다나 기대”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외관 확인을 넘어, 생활 편의성과 청결 상태까지 주부의 섬세한 눈으로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와 시공사가 즉각적인 보완을 약속해, 입주 전까지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 참가자는 “직접 확인해보니 마감과 설비, 공간 동선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며 “입주인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건설협회 전북도회, “지역경제 외면한 졸속 행정”

교통안전공단, 고창드론복합센터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 불허 논란

전북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준정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주한 ‘고창드론복합센터 건립 건축공사’(사업비 116억원)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전북 건설업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공단이 지난 9월 5일 공고한 해당 사업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배제했다”며 “공사 지역이 전북임을 감안할 때 지역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미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추정가격 285억 원 미만의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극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이미 지체된 공사 기간을 고려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공동도급을 불허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사업 지연과 공동도급제도는 개연성이 없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명분 없는 거부”라고 일축했다.

협회는 건의사에서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 보호라는 제도적 장치를 준정부기관이 외면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

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해 민생지원금까지 마련하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마지막 숨통인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미적용하는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도 “최근 3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주한 전국 대상 공사에는 모두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됐다”며 “이번 공사만 예외를 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공공건설 입찰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발주처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바이오기업, 유럽 진출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바이오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한다. 전북테크노파크와 KIST 유럽연구소가 함께 추진하는 ‘유럽 GBC-Gateway 프로그램’이 그 무대다.

GBC(Global Bio-Technology Collaboration Center,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의 이름을 단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준비 단계부터 현지 활동까지 전 과정을 중

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기업은 12월 독일 잘란트 주 자브뤼겐에서 현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가 기업은 △글로벌 투자 유치 대비 IR 고도화 건설링 △현지 연구소와 연계한 맞춤형 기술 교류 △독일 잘란트 주 소프트웨어 위크숍 △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 피칭 및 네트워킹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단순한 박람회 참가나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제 공동연구와 수출 기반 마련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지원이 강점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들이 기술력뿐 아니라 사업과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을 거점으로 한 유럽 현지 연구기관·투자자와의 연계는 연구개발 협력, 현지화 전략 수립, 시장 검증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오상근 기자

호남권 건설현장, 안전 강화 협의

대한건설협회 · 국토안전관리원, 사고 예방 협의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호남권역 시도회(전북·전남·광주·제주)와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철)는 최근 광주 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호남권역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추락사고 예방 대책 등 정책 추진 방향 △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 제도 △건설안전 수호천사 제도 운영 현황 등이 공유됐다. 이어 현장 기술인과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 관리 애로사항을 논의하며, 제도 운영과 예산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소재철 전북자치도회장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활용한 경험을 공유



하며, 장비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장비 지원 후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강제를 통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중소 건설사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재 전남도회장은 “현행 법률이 사업주와 법인 처벌 중심이라 현장 기술인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 기술인 안전의식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